

01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 해설** ①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둔다(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② [○]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 책임운영기관장은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 기관장은 2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설치&해제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기관장	공개모집, 최소 2년 이상 5년 이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	① 총정원 : 대통령령, ② 종류별·계급별 정원 : 총리령 or 부령 ③ 직급별 정원 : 기본운영규정
성과계약	중앙책임행정기관(특허청) : 국무총리와 성과계약 체결 소속책임행정기관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체결
운영기구	행정자치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심의 중앙행정기관별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 사업성과 등 심의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81~383

▶ ⑤

02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한다.
-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 해설** ①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하고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오히려 관청형성동기를 가지게 됨을 설명한 이론이다.
- ② [○] 관료 개인의 효용의 증감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관료들의 예산에 대한 효용은 대개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단지 일부분에만 관련된다고 본다.
- ③, ④ [○]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기능은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으로 떼어내고 가능한 권력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참모적 기능 수행을 선호한다고 본다.
- ⑤ [×] 통제기관은 국가조직들의 자금사용 및 정책집행방식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통제기관의 관료는 예산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본다.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핵심예산·관청예산과 관련된 기관(전달, 봉사, 규제, 계약기관)의 관료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36

▶ ⑤

03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해설 ①, ③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 동법 제60조

동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④ [×], ⑤ [○] 동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45

▶ ④

04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부산지방우정청
-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⑤ 충청지방통계청

해설 ①, ②, ④, ⑤ [○]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소속, 부산지방우정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충청지방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③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부조직법상의 17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행정기관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82

▶ ③

05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해설 ① [×]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는 시민개인수요 중심(집단×)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이동근무),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이동근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무 수행
재택근무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업무 수행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	자택 인근 원격사무실에 출근해 업무 수행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23, 724

▶ ①

06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 ㄹ.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ㅁ
- ⑤ ㄷ, ㄹ, ㅁ

해설 ㄱ [X]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의 형태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인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갈등에는 조정전략을, 부정적인 갈등에는 해소전략을 취해야 한다.

ㄴ [X] 협동이 아닌 타협전략이다. 타협(compromising)전략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뭔가를 양보하려고 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유형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ㄷ [O] 개인 또는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이 많을수록 갈등의 소지가 많다.

ㄹ [O] 경쟁전략은 다른 당사자를 희생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ㅁ [X] 조직이 무사안일, 획일주의, 정체된 사고방식 등으로 조직의 침체가 야기된 때에는 오히려 생산적 갈등을 조성(갈등 해소전략 X)해야 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14~416

▶ ④

07 다음 중 아르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조작(manipulation)
- ② 치료(therapy)
- ③ 협력(partnership)
- ④ 정보제공(informing)
-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해설 아르슈타인은 비참여·형식적·주민권력적 참여로 주민참여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①, ② [X] 조작, 치료는 비참여의 범주에 해당한다.

④ [O] 정보제공은 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 등이 있다.

③, ⑤ [X] 협력(대등협력)과 주민통제(자주관리)는 주민권력적 참여의 단계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27

▶ ④

08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해설 ⑤ [X]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은 점증적인 정책대안 선택이 가능한 가분적인 정책(divisible policies)이다. 즉 하나의 커다란 정책에서 여러 개의 세부 정책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중 일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점증적인 정책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교량건설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비가분적인 정책의 결정에서는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50

▶ ⑤

09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④ 한국고용정보원
- ⑤ 국민연금공단

해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X]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77

▶ ⑤

10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 해설** ① [X] BTO는 민간이 일정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민간에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 ② [O]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자이다.
- ③ [O] BTL은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건설 후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고,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민간에게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④ [O] BTL과 BLT는 비수익사업에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⑤ [O] BTO방식에 도입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수요의 과다추정 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지속적 재정부담을 발생시킴으로써 2009년 신규사업부터 폐지되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3

▶ ①

11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 ③ 서울대학교 총장
-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 해설** ①, ②, ④, ⑤ [O]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 ③ [X] 서울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8

▶ ③

1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 해설** ①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형식적 기회균등에 대한 수정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② [×]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즉, 대표성을 지닌 관료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집단 간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한다.
 ③ [○] 대표관료제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구성비율에 따라 관료를 총원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④ [○]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의 강요와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⑤ [○]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계층에 대한 공직진출의 실질적 기회균등(실현된 형평성)을 보장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2~455

▶ ②

13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해설** ① [×] 조례의 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⑤ [○] 동법 제27조

동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96~798

▶ ①

14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용통하는 것이다.
-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해설 ③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은 이월이다.

〈예산의 집행 - 신축성 확보방안〉

이 용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용통(국회의결 필요)
전 용	행정과목(세항·목) 간에 상호용통(국회의결 불필요)
이 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 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이 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초과지출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가능)
국고채무 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수입대체경비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능한 경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의 변경
총액계상예산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49~651

▶ ③

15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해설** ①, ④ [○] 영국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의 형태를 취한다.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 ② [×]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이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 ③ [○]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준입법·준사법·집행·감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⑤ [○]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합의제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62, 463

▶ ②

16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해설** ① [×] 민간위탁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등 정책기능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한다.
- ③ [○] 정치적 관점에서 민간위탁은 관료제가 자기 조직의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관료들이 퇴임 이후 보상의 일환으로 관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업무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9

▶ ①

17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 해설** ③ [×] 상위정책결정단계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결정의 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 making)이다.

상위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
1. 가치의 처리 2. 현실의 처리 3. 문제의 처리 4. <u>자원의 조사·처리·개발</u> 5. <u>결정시스템 설계·평가·재설계</u> 6. <u>문제·가치·자원의 할당</u> 7. <u>정책결정전략의 결정</u>	1. 자원의 하위배분 2. 구체적 목표설정 3. 중요가치설정 4. 정책대안의 탐색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6.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7. 최선의 대안 선택	1.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2. 정책의 집행 3. 집행 후의 정책평가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53, 254

▶ ③

18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조세는 중앙정부 지출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재원으로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이다.

- ② [×]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조세의 장·단점〉

장점	① 이자 부담이 없으며 부채관리와 관련된 자원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음. ③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음. ④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함.
단점	①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를 현 세대만 부담한다면,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조세를 통한 자본시설은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③ 과세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경직성)되기 때문에 일시적 대규모 자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시의성을 맞추지 못할 수 있음.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03

▶ ②

19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① [○]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직위(20%), 공모직위(30%), 부처자율직위(50%)로 충원된다.
 ② [○] 고위공무원단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③ [○]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특징이다.
 ④ [×]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⑤ [○]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6~458

▶ ④

20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해설 ① [×] 제1단계는 창조의 단계로 리더십의 위기가 발생한다.
 ② [×] 제2단계는 지시의 단계(지시를 통한 성장)로 자율성의 위기가 발생한다.
 ③ [○] 제3단계는 위임의 단계(위임을 통한 성장)로 통제의 위기가 발생한다.
 ④ [×] 제4단계는 조정의 단계(조정을 통한 성장)로 번문육례의 위기가 발생한다.
 ⑤ [×] 제5단계는 협력의 단계(협력을 통한 성장)로 탈진의 위기가 발생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32

▶ ③

21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해설 ② [○]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 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이다. 사례에서 정부개입의 목적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5

▶ ②

2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설 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 · 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③ [○]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제도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X] 주민투표제도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주민투표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⑤ [O] 주민소환제도는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94, 828

▶ ④

23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입대체경비
-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해설 ① [X], ②, ③, ④, ⑤ [O]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긴급 경비는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46

▶ ①

2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설 ① [○] 예비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10년×)로 한다.

동법 제23조 【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 국가재정법 제48조

동법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 국가재정법 제45조

동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 국가재정법 제46조

동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46~649

▶ ②

25 다음 중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해설 ③ [×] 바우처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화의 선택권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갖는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1, 52

▶ ③